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전국신도시의 중심축권을 누리는 3,813세대분양!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15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9월 1일 (음력 8월 2일) 월요일

조선대 이사 공백 더 이상 방치 안된다

3개월째 정상화 표류 … 각종 현안 처리 어려움

1988년 학원민주화 이후 20년간의 관선이사 체제를 벗고 정이사 체제 전환에 나선 조선대 법인 정상화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조선대는 정이사 체제 전환이 늦어지면서 지난 6월말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7월부터 3개월 째 '이사 공백 사태'를 맞고 있고, 지난 주에는 급기야 전직 이사들을 긴급 소집해 학교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긴급처리사무권'까지 발동했다.

조선대 법인 정상화는 당초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으나 ▲법인 정상화 결정권을 쥔 사학분쟁조정위의 법리 논쟁 ▲구 경영진의 비협조적인 태도 ▲교과부의 뒷짐 행정이 맞물리면서 방치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조선대가 정이사 체제 전환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6년 4월. 당시 교육부는 조선대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조선대측에 정상화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대는 지난 1월 정이사 후보자 명단을 비롯한 법인 정상화방안을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에 제출했다.

조선대 법인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차라리 정상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적어도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며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조선대가 최근 직전 임시이사들을 소집, 행사한 '긴급처리사무권'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선대측이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에 조속한 심의·의결, 정이사 선임 등을 요구한 것은 무엇보다 학사일정 차질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교과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민법에 명시된 '긴급처리사무권'을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대 일각에서는 "정부가 편법을 부추긴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임기가 종료된 이사들에게 중요업무를 맡기는 것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해석하는 교과부의 태도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긴급이사회에 참가한 조선대 전 임시이사진도 "도대체 우리가 안건을 의결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며 논쟁을 벌였다.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조선대의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데다 법인이 정상화될 경우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안들도 미뤄지고 있다.

'조선대 정상화 및 경영진 복귀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정해만(의대 교수) 운영위원장은 "시대에 맞는 학교간, 학과간 통폐합 또는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 등 굵직한 사안들은 임시 이사들이 의결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라며 "교수 채용을 할 때마다 긴급이사회를 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최근 교과부로부터 연구중심대학에 선정돼, 현재 60% 수준인 학생 대비 교수 충원율을 최소 6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교수 채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50여명을 채용했고, 2학기에도 내년 학기를 위해 교수 공채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선대 부속 남중, 여중, 남고, 여고 등이 산재한 중·고교 통폐합 등도 임시이사 체제로는 요원한 일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5·18 재현 '봄 퍼포먼스' 오는 5일 개막되는 2008 광주비엔날레는 올 가을 아시아지역에서 열리는 10여개의 비엔날레와 차별화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주제와 시상제, 부대행사가 없는 '3무(無) 비엔날레'로 치러진다. 이번 비엔날레의 '제안(Position papers)' 섹션에 참가하는 클레어 탄콘스(미국)의 5·18 광주 항쟁을 재현한 '봄' 퍼포먼스의 한 장면.

07 연례보고 일년동안의 전시 08

'3無 전략' 새바람 일으킨다

광주비엔날레 D-4, 시상·주제·부대행사 없이 전시 충실

"오쿠이의 '3無 전략'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제7회 광주비엔날레(5일~11월9일)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상제'와 '주제', 그리고 '부대행사'를 없앤 '오쿠이의 3無 비엔날레'가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9·16면〉

상당수 비엔날레들이 특정 주제와 시상제를 통해 차별화를 내걸고 있는데 반해 올해 처음으로 이같은 '관습'을 과감히 없앤 2008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여부에 국내외 미술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시행해왔던 시상제를 폐지했다는 점이다. 재단은 제1회(1995년) 때 쿠바작가 크쵸의 '잊어버리기 위하여'를 대상작으로 선정하는 등 해마다 참여작가들을 대상으로 2~6명을 시상했다. 지난 2006년에는 참여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총 상금 4만달러(한화 4천여만원)를 내걸고 '광주비엔날레 대상'과 '광주비엔날레 후원상'을 정식으로 제정하기도 했다.

광주비엔날레 첫 외국인 출신의 오쿠이 엔위저 예술총감독은 과감하게 시상제를 폐지했다. 젊은 작가들의 실험정신을 시상으로 서열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 비엔날레 중 시상제도를 운영중인 곳은 베니스 비엔날레(25만달러), 휘트니 비엔날레(10만달러), 오사카 트리엔날레(1천만엔) 등이다.

'주제없음'도 지난해부터 국내외 미술계에 화제가 됐던 큰 변화다.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경계를 넘어(1995년)' '지구의 여백(1997년)' '人+間(2000년)' '멈춤(2002년)' '먼지 한톨 물한방울(2004년)' '열풍변주곡(2006년)'이라는 주제 아래 작품과 작가를 선정했었다.

이 때문에 작가와 작품을 일정한 주제에 꿰맞춤으로써 현대 미술의 다양한 창작 욕구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현대 미술의 역동적 스펙트럼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이 초대된 것도 '주제'라는 일정한 '틀'을 없앴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위해 마련됐던 각종 축제와 부대행사도 자취를 감췄다. 미술 행사인 비엔날레에 걸맞게 철저히 '전시'에 내실을 기한다는 것이다. 다소 볼거리가 줄었든 감은 있지만 차별화된 '고품격 전시'로 승부한다는 전략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J프로젝트 부지 내 카지노 투자 고려 안해"

미 카지노 그룹 아델슨 회장 … 전남도 전략 차질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부지 내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하는 방안을 놓고 전남도와 투자협상을 벌였던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 미국 라스베이거스 샌즈(LVS.Las Vegas Sands)사의 쉘던 아델슨(사진) 회장이 '전남도에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투자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아델슨 회장은 특히 카지노 투자 대상지로 인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내부적이긴 하지만 J프로젝트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국인 카지노 개설을 추진해오던 전남도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델슨 회장은 지난달 28일 마카오에서 열린 '베네시안 카지노 리조트 개점 2주년' 행사에 참석,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 J프로젝트 부지에 카지노를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3년 전 전남도를 방문, J프로젝트 부지 내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개설하는 방안을 협의했었다"며 "그러나 당시 방문결과, 전남도에는 교통시설과 주택, 숙박업소, 인구 등 카지노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않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로선 (투자를)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델슨 회장이 지적한 전남도 카지노 투자 기피 사유

- 공항, 도로 등 교통 인프라 부족
- 호텔 등 숙박시설 부족
- 많지 않은 인구
- 빈약한 지역 경제력

그는 이와 함께 "최근 한국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카지노 및 리조트 투자유치문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과는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만약 한국에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단지를 건설한다면 그 대상지는 서울과 가까운 대도시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돈이 많이 몰려있는 인천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남이 카지노 유치를 원한다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대규모 국제공항이 부족하며, 도로와 철도 등 각종 교통시설이 미비하다는 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우암캠퍼스 창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18대 첫 정기국회 개회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10일까지 100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10년만의 정권교체', '여대야소' 등 정치지형이 대폭 변화한 가운데 열리는 만큼 향후 4년간의 국회 운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개회를 선언한 뒤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세제개편안, 규제개혁, 민생입법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는 또 2~3일 이틀간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인사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잠정적으로 10월6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대정부 질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12월2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9~10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기·가스요금 추석 이후 인상

최근 물가 급등에 따라 보류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추석 이후에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추석 연휴 전에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라며 "요금인상 폭도 애초 계획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주 간을 추석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큰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특별대책기간이 지나면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